

학교 환경교육 10년 - 평가와 전망

이 순 철

(한강중 교사, 녹색교육포럼 사무국장)

(2003년 6월) 서울 연서중 이수종교사의 '살아 있는 환경수업'

생명이 숨쉬는 깃벌을 지키는 것과 평화운동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난 4일 서울 연서중학교 1학년 4반에서 있었던 환경수업은 좀 특별했다. 환경운동, 특히 새만금 같은 깃벌을 지키려는 노력과 평화운동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종교에서 실천하는 핵심진리와 연계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중략)

수업을 마친 뒤 권영민 군은 "환경운동이 단순히 휴지를 줍고 분리수거를 하면 그만 인줄 알았는데 오늘 수업을 통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 평화를 실천해야겠다"고 말했다.(하략) /채향란기자 rani6@segye.com 2003/06/06 전교학신문

(2003년 9월) 부안 핵폐기장 건설 반대 공동수업 실시

"어제 300명도 넘는 부안 지역 초등학교생들이 서울에 왔다는 걸 아는 사람?"

핵 마크가 그려진 노란 티셔츠를 입은 정진영 교사의 한 마디에 실험 도구를 만지작거리던 아이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다. 정진영 교사는 지난 3일 반핵을 표시하는 노란 옷을 입고 서울로 올라온 부안지역 초등학교생들의 소식을 들려주었다.

"지금 부안에서는 80퍼센트도 넘는 학생들이 핵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반대하며 등교 거부를 하고 있어요." (중략)

공동수업을 진행한 정진영 교사는 "부안 핵 폐기장 건설은 우리들의 기본권인 생명권 침해의 문제"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핵 없는 깨끗한 세상에서 살 권리를 느끼게 하는 공동수업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성란 기자 yaromil@ktu.or.kr 교육희망기사)

(2003년 10월 30일) 경남환생교 천성산 관련 마산중·창원반림중 공동수업

환경을 생각하는 경남교사모임(이하 환생교)은 29일 마산중학교와 창원 반림중학교에서 천성산 도롱뇽 소송에 관한 공동수업을 진행했다. 환생교는 공동수업을 통해 도롱뇽이 소송을 제기한 까닭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공생의 의미를 가르쳤다.

1. 들어가는 말

위의 세 인용문은 2003년 녹색운동의 치열했던 상황을 담고 있다. 그 치열성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20여년 이상 축적된 운동의 결실이기도 하다. 그 '결실'이 사람 말고도 지구상에는 다른 생명이 있으며 그것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학생의 깨달음인 것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노릇이, 이런 얘기는 사실 진작에 교육 되었어야

하는게 아닌가? 무엇이 문제인가? 왜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불안항쟁이나 새만금 사태를 계기삼아 새삼 새로운 듯이 교육해야 하는가?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생명에의 외경심' 내지는 '생명권'에 대한 초보적 인식을 가진 학생이라면 마땅히 '새만금 사업'에 반대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정말 그렇게 연결되는가? 사실 위의 두 공동수업 장면이 내는 '효과'가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정치적 태도'를 갖도록 한다는데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생명권'에 대한 인식은 단편적인 지식으로 끝나고 말 것이기에 그러하다. 새만금이나 불안 방폐장 건설의 주요 반대 근거중 하나가 새만금 갯벌이나 불안 바다의 무수한 생명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렇다면 다른 생명의 '살 권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불안 방폐장이나 새만금 간척에 반대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허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두가지 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생명의 살 권리'를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불안 지역민의 방폐장 건설 반대에 '지역 이기주의' 딱지를 붙이면서 '원전수거물 관리센터'는 어느 지역엔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쟁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었다.

현존 한국사회의 환경갈등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는 즉각적으로 지금까지의 환경교육에 대한 되새김과 앞으로의 환경교육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살펴볼 것을 강요한다. 반성과 전망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해마다 환경보전반을 운영하면서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생명에 대한 외경심의 일깨움을 기본 '소양교육'으로, 생태적 감수성 키우기를 체험학습 영역의 태도 형성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환경관련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는 즉각적이며 현장감 있는 인터넷 매체 활용 대응교육을 해온 자칭 '환경교사'인 필자에게 든 의문이 이런 것이다. 왜 한국의 환경교육은 10여년 이상의 역사를 축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방폐장 문제와 같은 쟁점이 이른 바 '지방화 시대'를 외치는 '참여정부'에 이르러 그 지방화 시대의 주체로 나서야 마땅한 지역민의 대규모적이며 극단적인 항쟁을 불러 일으키는 쟁점이 되어야만 하는가? 1년여에 걸쳐서 거의 매일 온갖 방식의 대중집회 또는 문화행사 나아가 삼보일배 대행진과 같이 목숨을 건 '방편'을 동원해도 투쟁의 '극한성'에 대한 심지깊은(?) 염려는 있을 지언정 방폐장이나 새만금 문제는 즉각 해결되지 않는가? 왜 2004년에 이르러 내가 실천하는 체험적 환경교육 활동이 어떤지 시대 담보적이며 지식과 태도의 양 측면에서 '순환론'의 오류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게다가 한국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참여정부'의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한 '정치적 방해'속에서도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주민투표'를 성사시킨 불안사람들의 '정치적 성과'는 어디에 축적되고 있는 것인가? 그 투쟁의 '성과'는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2003년의 불안항쟁과 2004년의 '도룡뇽 생명권 투쟁'은 어떻게 이어지며, 환경교육실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글은 이런 의문에 대한 미흡하나 짧은, 그리고 매우 가설적인 현직교사의 답변임을 전제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보편성과 특수성

1980년과 1987년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합성이, 1997년에는 노동자 기본권을 향한 합성이 올려퍼진 해였다면, 2003년은 새만금 투쟁과 부안항쟁을 매개로, 최소한 새만금과 부안의 온생명을 대변하는 성직자들의 ‘삼보일배’ 방식을 빌어 ‘온생명의 기본적 살권리’가 선언된 해였다. 이 합성은 마침내 2004년에는 지울스님의 천성산 ‘도룡뇽’ 생명권 보장 투쟁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오래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 문제는 향후 ‘지속가능 교육 10년’의 방향에 대한 논쟁의 ‘씨앗’을 배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2003의 ‘부안항쟁’에서는 환경운동 10년의 모든 쟁점이 집약되어 드러난 것은 물론, 한국의 사회운동속에서 잊혀진지 오래된 이른바 ‘변혁’과 얽혀진 문제들이 남김없이 드러났다. 아주 오래된 주제처럼 여겨졌던 ‘반핵’이 마치 새로운 이슈처럼 점화되었고,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자치와 민주주의 문제에 한국 민주화 10년의 한계문제까지 몽땅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덧붙여, 초중고생들의 등교거부까지 이어지면서 부분적으로는 교육문제까지 쟁점 전이가 이루어진 바 있다. 여기에 시민운동단체와 지역의 ‘반핵항쟁 지도부’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해로 뚫고 성사시킨 주민투표는 잊혀진 이증권력이라는 단어를 되살리게 한다. 2003년의 부안투쟁은 1987년 6월 투쟁이후 거리에서 보여진 모든 형태의 전술이 종합적으로 구사될 정도로 치열하고 지속적이고 완강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노동운동권’의 경우 그닥 큰 관심을 보인 것 같지도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했으며 정치적 성과를 챙기고 있지 못하다. 요컨대 1980년의 광주항쟁이나 1987년의 6월 투쟁에 버금가는 ‘항쟁’이 군단위인 부안에서 이루어졌고, ‘참여정부’의 조직적인 방해를 뚫고 성사된 주민투표는 분명 이증권력 상황임에도 한국의 소위 ‘노동(좌파) 운동권’의 관심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더 회안한 것은 항쟁을 거치면서 진행된 17대 총선에서, 부안군 국회의원으로 바로 그 ‘방폐장건설’을 밀어붙인 정부의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사실이다.

부안항쟁에서 노정된 문제의 핵심은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비가역적인’ 정치적 성과라는 것이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참여정부’는 호시탐탐 반전의 기회를 노리다가 부안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방향을 바꾸려 한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민도 부안처럼 비슷한 ‘항쟁’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혹은 그 지역민이 부안군민과 달리, 주민투표로 방폐장 건설을 ‘찬성’하면 건설되고 마는 것인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무언가 단단히 ‘뒤틀린 지점’이 있는 게 분명하다. 대체 어디에서 뒤틀렸는가? 2002년의 대선에서 노무현은 ‘모든 약속’을 다했다. 지디피 6%의 교육재정부터 공공병원 확대, 새만금 사업 중단, 고속철 노선 재검토 등등. 말하자면 ‘공적인 쟁점’을 권력을 장악하면 그것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다했다. 그러나 하나하나 약속을 뒤집어 마침내 지울스님의 58일 단식을 이끌어 냈고, 그 이후에도 ‘여반장’처럼 말을 바꾸어가면서 ‘기만’을 일삼고있는 중이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내게 이 문제는 매우 단순해 보인다. 한국사회의 환경운동은 사회당, 사민당 수준의 ‘좌파정치’조차도 완전히 봉쇄된 군사독재정권하에서 ‘노동운동’과 거의 비슷한 시점에

시작되었다. 때문에 노동운동이 그럴 수 밖에 없었듯이, 환경운동 또한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1987년 6월투쟁을 거치면서 노동운동이 '정치화'의 계기를 놓친채 정치적 '배제'의 처지를 10여년 이상 감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에 비해, 1987년의 6월투쟁을 주도한 민주화 운동의 흐름속에서 탄생한 '시민운동'은 민간정부하에서 크게 영역을 확장하였고, 시민운동 영역에 자리잡은 '환경운동' 또한 그러했다.

이러다 보니 '앞 뒤'가 바뀌어버렸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서구에서는 이른바 68투쟁이후 '신사회운동'의 정립속에 등장한 '녹색당'이 가장 '근본주의적'인 정치세력으로 새롭게 등장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정치화된 '좌파 노동운동'으로서의 사회민주당 체제를 근본층위에서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환경운동은 그러하지 못했다. 노동운동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현하여 '민주화 투쟁'속에서 자기정립을 해온 바로 그 까닭 때문에 철학적으로는 '근본 생태주의'를 바탕에 깔고 있는 듯 보이면서도 사실상은 '환경운동'을 '시민운동'으로 수행해 온 셈이다.

우리나라 환경운동의 역사는 필자의 관점에서 '이슈의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유사하다. 하지만 그 쟁점에 대한 '정치적 태도'의 측면에서는 매우 특수하다고 판단된다. 그 까닭은 다름아닌 '좌파정치'가 전혀 활성화되지 못한 가운데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일환으로 환경운동이 등장한 때문이다. 이것이 한국 환경운동의 특수성이다. 요컨대 한국 환경운동의 '이슈'는 대체로 선진국과 동일하게 근본생태주의나 사회생태주의적 지향 속에서 '도출'되고 있지만 운동 주체는 '시민'으로 설정된다. 이런 한국 환경운동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문제는 2001년도에 부분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발전노조 파업을 둘러싼 논란속에서 '환경단체'들은 매우 '급진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때의 환경운동단체 '포지션'이 '보편성'을 제대로 구현한 것이었다. 당시 환경운동단체들은 '공룡한전'을 외국기업에 '분할매각' 해서라도 그 지긋지긋한 '관료적 관성'에 의한 '원전건설의 엄청난 추진력'에 타격을 가하고자 하였다. 때문에 한전의 분할 해외매각에 대하여 찬성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며 노동운동의 내셔널 센터인 민주노총과 부분 대립한 바 있다. 노동운동보다 더 '근본적'인 바로 이 모습이 '근본 생태주의'적 지향에 부합되는 포지션이라고 필자는 생각하며, 선진국의 환경운동이 '사민주의'체제속에서 제도화된 노동운동보다 더 '근본적'인 정치적 입장을 보이는 이유이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특수성' 때문에 한국 환경운동은 불안향쟁이나 이후 이어진 지울스님의 천성산 도롱뇽 생명권 쟁취투쟁에서 '시민운동'의 포지션을 취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지울스님의 투쟁은 '급진적이며 비현실적인' 테제에 대한 집착외에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리고 이는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고자 하는 '근본 생태주의'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환경교육에도 고스란히 연결된다. 그것은 환경교육 자체에 내재된 고유한 문제로 이어진다. 사실, 환경운동의 일각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짚고자 하는 노력은 이어져온 바 있다. 이를 '테제'화 한다면,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의 세계적 전개속에 심화된 '빈부의 격차'를 극복하는 문제를 환경운동은 최소한 '환경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싸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의 환경교육이 환경관리주의에 갇혀 있는 '환경교

과교육'과 웰빙 수준의 '생태적 감수성' 함양 체험교육으로 이원화된 까닭이 다른아닌 '환경정의'의 문제를 놓쳤기 때문이라면 지나친 판단일까?

3. 환경운동 10년 속의 학교 환경교육 10년

가. 정규 교과목으로서 '환경'교과의 등장과 경과

1) 환경교과목의 태동배경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교육에 대한 '논의'는 환경부에 의해 1983년경 이루어졌다. 당시 는 한국 최초의 환경운동이 태동하던 시기였다. 말하자면 환경운동의 '새벽'에 해당되는 시기였으며, 이 운동은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연장속에서 정초되었다.

그리고 1990년 '낙동강 폐물 사건'이 일어나기 약 7년전이었으며 1987년 6월투쟁 약 4년전이었다. 돌이켜보면 급속한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과 자본간의 모순이 내재적으로 축적되는 가운데, 이른바 환경오염의 속도 또한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군사독재 시기에는 순수 '공익적' 운동조차 성립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이 시기의 환경운동 또한 구속을 결의하고 진행되는 상황이었다. 공기와 물의 급속한 오염으로 대표되는 산업화의 병폐속에서, 군사정부조차 '환경부'를 정부 부처로 두는 등 '환경오염' 문제는 이미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고 있었다.

이렇게 1983년 환경부에 의해 제기된 '환경오염'의 문제는 하지만 오늘의 시각에서 보건데 순수 '기술공학적' 또는 '관료 테크노랫'의 수준에서 제한되었다. 본격적인 환경문제의 사회화는 1987년의 6월항쟁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초중고교에서 학교 환경교육의 출발은 민주화의 시작점인 1987년과 비슷한 1989년이 된 것이다.

2) 5~6차교육과정과 환경교과목의 신설 및 환경교육의 강조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부터 조금씩 과학교과를 중심으로 환경을 포함한 '과학과 사회' 연관성을 강조하는 흐름이 들어오면서 환경교육이 태동하기 시작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별도의 '환경교과'가 선택과목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배치되었으며, 다른 교과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서 강조되며 이루어지고 있다. 1999년에는 교육부에 의해 환경교육이 중점 교육목표의 하나로 지정되기에 이른다. 이에 각급 학교의 모든 교과 활동에 환경교육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런 흐름은 제7차 교육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져, 2001년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여 2003년에 초중고교 전체가 시행중인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고시될때 이미 환경교육을 중점지도 내용의 한 부분으로 선정하여 모든 교과에도 관련단원에 환경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3) 7차교육과정의 전면시행속의 환경교과 교육

2004년은 초중고교에서 7차교육과정 전면시행 2년째인 해이다. 7차 교육과정속의 환경교육은 간단히 말해서 학교급별 '다양화'로 정리할 수 있다. 유치원 교육에서는 별도의 교과서 없이 5개 영역의 교과에 걸쳐서 통합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생태기생 등의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많이 확산되어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국어, 슬기로운 생활, 도덕, 사회, 과학, 실과 등 여러 교과에 환경관련 내용이 분산 수록되어 교육된다. 한편 학교단위로 재량시간을 활용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며, 이 경우 주로 텃밭 가꾸기 등의 실습과 체험위주 활동으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중학교에서는 '환경'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7차교육과정이 '수요자 논리'를 바탕에 깔고 수요자로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강조함에 따라, 중학교의 경우 '환경'을 선택교과목을 정하는 학교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 한문이나 '컴퓨터'를 선택한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7차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환경교과목도 '다양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명칭에서 '환경과 인간' 등 기존 교과서의 틀박힌 모습의 탈피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국사' 교육 축소 논란에서 드러났듯, 선택교과목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환경교과 선택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기도처럼 '도교육청 선택과목'으로 지정될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요컨대 선택교과목이 크게 늘어나면서 고등학교에서의 환경 교과교육은 정체 또는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4) 2004년 환경 교과교육의 실태 요약

2004년 현재 환경교육은 독립 '선택과목'이면서 동시에 관련 과목의 관련단원에서 병행 실시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양적으로는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환경'이 독립 교과목으로 정규교육과정에 편재되어 있으면서도 학제적 환경교육이 병행되고 있는 나라는 매우 드물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교과교육과 체험학습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이 체계화될 경우 효과적인 환경교육이 가능한 '조건'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5) 환경교과교육의 문제점

교과교육 차원에서 전개되는 환경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교육내용의 설정 문제 있어서 대체로 과학기술적 접근, 기능주의적 접근에 치우쳐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환경을 인간 외부의 대상화된 영역으로 그 의미를 한정시키고 있는 점, 환경문제의 발생원인을 인구문제 같은 생물학적인 요인이나 산업화, 도시화 등 현상화된 측면으로 한정시키고 있는 점, 환경문제의 실상을 공동체의 붕괴나 사회내의 갈등관계 등이 제외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인간 외적인 영역으로 협소화시키고 있는 점, 그리고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조적 처방보다는 기술공학적인 접근을 강조하는 경향과 윤리적으로는 개인주의적이고 공리주의적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환경문제가 내재하고 있는 철학적, 사회적, 경제

적 측면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한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 환경교육의 내용의 체계화가 미흡하고 학년간, 교과간 목표와 내용의 유기적 연계성이 부족한 점이다. 대상별, 시기별 및 상황별로 적절한 내용 구성과 지도 방법, 그리고 그에 터한 시행방법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초·중등 학교 급별, 학년별 내용의 재구성하여 적절한 지도방향 등 교육내용의 체계화가 미흡하다.

목표 분류상 '지식'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차 강화되고 있어 적절하다고 평가되나 '기능'의 영역목표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가치지향과 태도 형성'의 목표는 전체 학년에 걸쳐서 분산되어 있으며, '참여'는 초등학교에서만 제시되어 있어 목표들간의 유기적 연계성이 부족하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대규모의 '환경갈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를 다룰 수 있는 교육내용과 접근방법이 현실을 따르고 있지 못하다.

또한 환경문제의 많은 영역 중 일부분만이 단계적으로 학년단위에 맞게 연계되어 있을 뿐 대부분 학년이 올라감에도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교과간의 연계성에서는 다른 교과와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것이 많아 교과간 적절한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환경교과교육이 '지식중심'으로 치우친데 비해 환경 특별활동이나 체험학습활동은 '활동중심'으로 치우쳐 이원화의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초등학교는 7차교육과정 자체가 모든 교과의 '활동중심 재편성'을 도모했기에 부분적 지식교육 + 전반적 소양 교육(=생태적 감수성 키우기)이 당연하다 하여도, 중고교에서는 둘 사이의 연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중학교의 경우는 '환경교과' 선택이 거의 없기에 이 두가지 '연계활동'을 교사 스스로 강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야외 체험' 중심의 전일제 특별활동을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탐사활동'으로 일관하게 되며 체계적인 지식교육을 결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나. 교과목을 초월한 '환경교사'들의 자발적 실천과 그 결과

환경교과교육이 내용과 형식 양측면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가운데, 환경교과교사가 아닌 여타 과목의 교사들에 의한 '환경교육'은 거의 15년에 걸쳐 확대되어 왔다. 결국 우리나라의 초중고교 환경교육 10년 역사는 교과목의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이며 창의적인 실천에 의존한 역사였다. 그리고 그 '실천'은 현실속에서 제기되는 '환경의제'의 성격과 이에 의한 '환경운동'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환경교사들의 실천은 초기 환경운동이 그러했듯, 군사독재의 '감시'를 뚫으며 이루어진 일종의 '민주교육' 실천 영역에 속하였다. 1989년에 결성된 전교조는 1천7백여명의 해직자 내면서 조직의 모습을 갖추면서 '참교육 실천'의 영역을 다양하게 개척해 나갔다. 이를 위해서 창립초기부터 '참교육 실천위원회'가 꾸려졌다.

전교조 참교육실천위원회는 1991년에 '환경교육' 분과를 구성하였다. 환경교육 분과에서는 개별적 분산적 실천을 집약해내는 기관지 성격의 '환경교육'을 발간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새로운 주제영역으로서 '환경교육'을 알려나가기 시작했다. 이에 개별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천해 오던 교사들이 한 두명씩 모여들게 되면서 교과외 환경교육 실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한편 이 시기의 환경운동은 ‘공해추방운동연합’이라는 오늘날 ‘환경연합’ 전신의 명칭에서 보듯, 공해추방운동 시대의 말기라 할 수 있었다. 더불어 당시까지 한국사회에서는 ‘금기영역’에 속했던 반원전운동의 초기라 부를 수 있을 시기였다. 물론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모든 ‘불인’이 해체되고 본격적 ‘반핵투쟁’의 시기가 전개 되는데는 1987년의 6월 투쟁으로 변화된 정치지형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1987년의 6월 투쟁으로 군사독재 정권이 반쯤 무너진 상태에서, 1990년대 초반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안면도 반핵투쟁은 한국사회에 내재된 원자력 발전소와 ‘핵문제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였다. 이 시기는 또한 1992년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군사독재 말기의 시점이었다. 군사독재는 물러가면서 ‘방사능과 핵’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던져놓고 사라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비조직적으로 드문드문 이루어진 실천이 반핵에 터한 운동에 연계되어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992년의 대통령선거 결과는 본격적인 반원전투쟁의 ‘점화’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말하자면 1987년 6월투쟁의 ‘불철저한’ 마무리가 일관되고 철저한 민주화의 지연을 낳았고, 이는 1990년의 안면도 항쟁이 1994년에 굴업도로 튀었다가, 꼭 10여년이 경과한 2004년에 재점화 되는 ‘불씨’를 남기게 된 것이다.

1995년에 이르면 ‘환경교육’이라는 새로운 범주의 교육적 실천 경험이 학교현장에서 상당수준 축적되고, 이러한 실천을 해온 교사들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당시에 결성된 환경교사들의 모임이 오늘의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이다. (원래 이름은 ‘환경을생각하는전국교사모임’이었다. 2004년에 이름을 바꿨다.) 이때부터 환경교사들의 실천은 체계화 조직화의 양상을 띠게 된다. 수질과 대기오염에 대한 분석적이고 실험적인 지식교육에 더하여 ‘생태계’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교육을 주로 전개하는 가운데, 안면도 항쟁이나 굴업도 투쟁과 같은 본격적 원전반대투쟁을 계기로 보다 포괄적인 ‘녹색교육운동’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부분적이고 지식중심적인 환경교육에서 보다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이념과 사상에 토대한 ‘녹색교육운동’으로의 전환은 여러차례의 ‘워크숍’과 연수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갖추어 갔다. 1996년에는 이러한 연구들이 결실을 맺어, 부분적이며 교과 한정적인 ‘환경교육’을 넘어서자는 취지의 ‘녹색교육’ 이념이 새롭게 정립되면서, 기관지 ‘환경교육’도 이름을 ‘녹색교육’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후 3년여 경과한 1999년에는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생태론적 교육노동운동론’이 정립되기에 이르러, ‘지속가능한 생태사회 건설’과 ‘태양 시대로의 이행’을 위한 준비하자는 모토속에 ‘녹색교육’의 이념형이 풍부화된다. 특히 1999년에는 ‘동강댐’ 문제가 제기되면서, 1만 2천명의 교사들이 반대 서명에 참여하여 새로운 ‘녹색교육’의 지향이 실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한국에서 환경교육의 역사 10년을 돌이켜 보면 1987년과 1992년이라는 두 결절의 해를 만나게 된다. 1987년은 ‘6월투쟁’이 벌어진 해였고, 이어서 ‘공해추방’운동이 ‘반핵투쟁’으로 확대되어 가는 계기가 되는 해였다. 한편 1992년은 환경에 관한 리우회의가 있었던 해였다. 19987년은 한국 환경운동의 역사 특수성을 결정하는 해였고, 1992년은 ‘보편성’을 결정하는 해였던 것이다. 바로 이 두 결절의 년도를 전후로, 우리나라의 환경교

육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트게 되었던 것이다. 제도권 교육과정 내부에서는 ‘환경교과목의 채택’을 한 축으로, 제도권 밖에서는 전교조 참실위원회로부터 유래된 ‘환경교사’들의 자발적 실천을 동력으로 학교 교육속에 유입되었다. 특히 ‘선택’과목으로 교과화된 ‘환경’교과서의 내용이 과학기술적 ‘합리성’의 테두리 내에 묶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과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는 ‘소박한’ 환경관리주의 교육으로 갖히게 되면서 두 방향의 실천은 점점을 잃어갔다. 요컨대 환경 교과교육이 환경관리주의에 입각한 지식중심 교육의 한계에 갇혀버리는 동안, 환생교 교사들의 실천은 현시대 녹색운동의 조류를 따라 그 영역을 광범위하게 펼쳐져 진행되었으며 ‘녹색교육’의 이념은 그러한 실천과 사상 이념적 모색집약된 결과이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지식보다 ‘체험활동’이 강조되면서 환생교 교사들의 실천도 이러한 흐름의 영향속에 놓이게 되었다. 2004년에 이르러 ‘생태기생’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야외에서의 도시하천, 조류 등 동물에 대한 조사 및 탐사, 습지조사와 탐사, 야생화 탐사, 숲과 나무와의 교감, 갯벌탐사 활동 등이 1995년 무렵부터 환경교사들에 의해 초보적으로 실천되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에는 이러한 ‘생태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방향의 교과외 환경교육이 상당한 정도로 ‘만개’할 것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1997년의 ‘경제위기’가 환경교육의 확산에 브레이크가 되었다.

1997년의 경제위기는 온 국민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는 계기였고, ‘환경문제’는 국가 경쟁력 이데올로기에 밀려 부차화되었다. 정규 교육과정속에 선택교과목으로 편성된 제도권 ‘환경교육’의 쇠퇴는 이 시기에 준비된 것이나 다름 없었다.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폭을 넓히면서 동시에 ‘국가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게 된 까닭이 바로 1997년의 경제위기였다. 부분적으로 신자유주의 지향의 싹을 내포하고 있었던 김영삼 정부의 제6차 교육과정이 ‘자기주도적 학습’등 ‘학습자 중심성’을 강조했던 것과는 또 다른 흐름이었다. ‘민주화 10년’의 결산 비슷하게 이룩된 이른바 ‘정권교체’ 정부로서의 김대중 정부는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충분히 소화시킬 것으로 기대된 바 있다. 물론 이는 ‘교육에서의 민주주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로, 교사를 교육의 공급자로 간주하는 ‘시장원리’의 만개와 확산속에서 꺾인 바 있다. 2004년에는 시장원리와 국가경쟁력이 합쳐져, ‘영재교육’이라는 강력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한편 이 시기는 경제위기 극복에 온국민이 동원되다시피 하는 가운데 절보기에 이렇다 할 ‘환경갈등’은 드러나지 않은 듯 보였다. 하지만 6년여 가까이 새만금 간척사업이 강행중이었고, ‘시화호’가 그 고질적인 문제를 내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997년의 경제 위기는 이런 문제의 ‘대두’ 자체를 막아왔다. 때문에 이 시기의 환생교 교사들의 실천은 지식보다 체험을 강조하는 6차교육과정의 흐름을 타고 ‘생태적 감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갔다. 1995년 무렵부터 조류, 하천, 숲 등의 탐사활동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여, 98년에서 2000년까지 보편화 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흐름은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보편화되었으며 7차교육과정이 초중고 전체를 걸쳐 전면적으로 시행 완료된 2003년에는 ‘환경교사’가 아니더라도 ‘생태기행’이나 텃밭 가꾸기 등이 학교단위 체험학습 영

역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 나타났다.

요컨대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교육'은 '과학기술적'이며 '기술관료적' 문제해결의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는 기존의 선택교과목으로서의 환경교과교육과 '생태적 감수성' 함양 중심의 교과외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체험학습활동 영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앞의 '서두'에서 보인 바, 생명에의 외경이나 '생명권'에 대한 인식과 '방사능폐기장건설' 및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문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계에 직면한 것처럼 보인다. 요컨대 생태적 감수성의 '함양'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의식의 '진화'문제에 부딪친 셈이다.

다. 환경운동과 환경교육 10년의 결과들

2004년에는 10여년전 '군사주의' 문화속에서, 외출타기 등의 수련활동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것과는 전혀 판판의, 야생화 탐사 등의 프로그램이 '야영 수련활동'에 편성되어 있다. 이는 확실히 엄청난 변화임에 틀림없다. '환경교육진흥법'은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경기도는 이 법의 많은 부분을 '지방정부' 수준에서 실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과거 '군사문화'의 잔재로 이어져 오던 '수련시설'들이 체험 생태교육시설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화 10년'과 '환경교육 10년'이 겹쳐진 결과이기도 하다. 다른 변화도 있다. 2001년에 어거지로 추진된 김대중 정부의 7.20조치는 대도시 지역에서의 '거대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상당한 정도로 실현했다. 현재 경기도 신도시지역을 제외한 서울·부산 등의 대도시지역에서 초중고교의 학급당 인원은 30명 전후를 헤아리고 있는 상태이다. 10년전인 1994년에 그 숫자가 50여명에 이르던 것에 비하면 크게 달라진 것이다. 새로 개교하게 되는 학교는 거대학교가 되지 않도록 조절되며,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학교건물은 예전의 단조로운 '상자형 벽돌집'을 벗어나 다양한 '건축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1996년경부터 '문제'로 대두되어 2000년경부터 '운동'으로 성립된 바 있는 '학교공간의 녹지화' 문제와도 이어진다. 특히 1999년 전교조 합법화와 더불어 '생태론적 교육노동운동'이 제안되면서, 생태적인 '작은학교' 개념이 큰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사실, 1998년 무렵 공교육의 '황폐화'는 '학교붕괴'라는 현상으로 지칭되듯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 있었다. 당시 학교의 문제는 원시적이고 낙후된 재래식 '화장실'로 집약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생태적인 '작은학교'의 개념이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었다. '녹색교육' 이념의 정초와 더불어 나온 생태적으로 조화로운 '작은학교'의 이념은 2004년에 이르러 그 '현실속의 실현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학교숲 가꾸기, '생태연못 조성', 학교 운동장 잔디갈기, 학교담장 허물기 등 학교를 '반생태적 황무지'에서 다양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적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는 흐름이 정착되고 확대되는 중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제 21'과도 맞물린 사업으로서, 그 결과 대도시지역 초중고교의 '녹지면적' 비율이 5% 이하에서 10% 이상으로 높아져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대략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난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간단히 말해서 교과목의 환경

교육 실천의 방향이 공해와 환경오염의 추방 및 녹색소비를 지향하는 ‘환경관리주의’에서, 자연친화적인 감수성 함양과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키워나가는 ‘생태적 감수성’의 함양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런 실천은 이제 ‘보편화’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한편 2004년에 이르러 두드러진 점은,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생태기행이나 생태탐사 등의 프로그램이 ‘상업화’ 수준까지 진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종합해 보면, 현단계 초중고에서의 학교 ‘환경교육’은 기본 방향이 ‘환경관리주의’를 떨치지 못한 환경교과교육이 쇠퇴한 가운데,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체험학습활동이 크게 확산된 상태이다.

4. 환경교육의 미래를 암시하는 상징적 사건

-‘영재교육진흥법’의 통과와 ‘환경교육진흥법’의 계류

가. 1997년의 경제위기와 국가경쟁력 이데올로기의 확산

1996년경 크게 확산될 것처럼 여겨졌던 학교 환경교육은 1997년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크게 굴절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아이엠에프의 요구에 굴복한 김대중 정부는 초기 ‘민주적 시장경제’ 노선을 저버린채 ‘민영화’와 ‘개방화’를 주축으로한 범세계적 금융신자유주의 ‘세계화’노선으로 기울었다.

이런 흐름은 교육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경제논리에 근거하여 ‘수요자’로 설정된 학부모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취지의 7차교육과정이 입안,시행되었다. 7차교육과정은 애초의 취지를 전혀 구현하지 못한채 단지 ‘선택교과목’ 수를 늘리는 것으로 그쳤다. 이런 과정속에서 ‘환경교육’은 앞에서 언급했듯 엄청나게 많아진 ‘선택교과목’중의 ‘하나’로 그 위상이 좁혀지게 되었다. 애초 별도 교과서를 저작하여 실행기로한 ‘환경교과교육’의 근본 바탕이 희석된 셈이다. 이는 초중고교에 ‘새마을부’에 뒤이어 설치되었던 ‘환경부’가 ‘쓰레기 분리수거’와 청소를 담당하던 학교안의 ‘잡역부서’로 전락했다가 지금은 아예 사라진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이런 가운데 번성하는 체험 환경교육은 확실히 무언가 잘못된 상황을 반영한다.)

한편 1997년의 경제적 충격은 한국사람들의 뇌리속에 너무도 깊게 각인되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경쟁력’의 이데올로기가 맹위를 떨치게 되었고, 이런 이데올로기는 공기업 민영화는 물론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직화’가 민주노총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이루어진 배경이 되었다. 민주화의 결과로서 등장한 ‘김대중 정부’가 반민중,반노동자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결과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공교육에도 반영되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교체제와 교육과정의 개편’이 모색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화 10년의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민주화’의 추세에 따른다면 공교육은 더욱 평등성을 ‘강화’하고 경쟁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다. 특히 1997년은 ‘정권교체의 신화’와 함께 전통야당 ‘김대중 민주당’ 정부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정당성의 근거로 삼아 들어선 해였다. 당연히 국민들은 김영삼 정부보다도

‘더 많은 민주주의’를 기대하고 있었으며, 실제 ‘비판적 지지론’이 이때까지 살아 남을 수 있었던 근거는 ‘민자당으로 투항’한 김영삼과 전통 야당을 유지하는 김대중은 다를 것이라는 ‘신화’가 살아 있었던 때문이었다. 때문에 김대중 정부는 아이엠에프 위기속에서 잠시 교육재정을 감축할 수 밖에 없었지만, 공교육 강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임기말인 2000년부터 공교육 재정은 다시 확대될 수 밖에 없었으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체제의 재편을 위한 기본방향은 ‘공교육 강화’와 상치되지 않도록 고등학교 교육체제의 부분적 개편으로 한정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요컨대 평준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그것을 ‘보완’한다는 개념의 ‘자립형 사립고’나 ‘외국어고, 과학고’ 등의 특성화 고등학교 확대정책이 그것이다.

자립형 사립고 확대정책은 2001년 전교조와 교육시민운동 단체들의 저항에 부딪쳐 전국적으로 6개 정도 지정하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된바 있다. 다음아닌 2004년 올해가 ‘시범운영’의 마지막해이며, 확대여부를 다시금 결정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자립형 사립고’ 문제는 아직도 내연중에 있다.

한편 현 정부는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 벽에 부딪치자 다른 방향으로 ‘국가경쟁력 함양’의 이데올로기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아냈다. 바로 ‘영재교육’의 확대라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2004년 현재 ‘환경교육’의 기이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된다. 2004년 현재 ‘환경교육진흥법’을 계류시키고 있는 국회는 이미 2002년 16대에서 ‘영재교육진흥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률적 토대를 완비한 후 ‘부산과학고등학교’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 등 범정부적인 지원과 지역자치정부의 엄청난 재정지원을 받는 ‘영재학교’로 지정된 바 있다. 2003년도에는 ‘영재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한다는 목적하에 30시간짜리 ‘영재교육 연수 1기’를 진행하였고, 2004년도에는 2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2004년도 하반기인 현재, 90시간짜리 영재교육 심화과정 연수가 진행중이다. 이렇듯 ‘국가경쟁력 이데올로기’가 영재교육진흥법이나 영재학교 등의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학교 ‘환경교육’의 진흥을 바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체험 환경교육의 확산과 환경교육의 불균등 발전

앞에서 언급했듯, 학교환경교육은 초기 ‘환경관리주의’에서 시작하여 현재 ‘생태적 감수성’ 함양교육에 근접해 있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쓰레기 분리수거’가 학교에서 어느 만큼 정착해 있는 수준을 반영하듯, 이를테면 자원 재활용, 에너지와 물 덜쓰기, 폐식용유로 비누만들기, 과대포장된 물건 안쓰기 등등의 환경관리주의적 ‘실천활동’은 이제 학교에서 가정으로 ‘역수출’되고 있는 정도이다. 여기에 갯벌탐사, 숲체험활동 등등은 ‘학교 단위’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예전에 군사주의적 성격을 띠었던 ‘야영수련’ 프로그램에조차 ‘풀과 나무’와 교감하는 프로그램이 설정되어 있는 정도이다.

학교내에서의 이러한 흐름은 학교 밖에서도 감지된다. 특히 초등학교 대상으로 일종의 수학여행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프로그램 목록을 보면 ‘생태기행’적 발상의 프로그램도 다수 눈에 띈다. 이러한 경향은 인터넷에서 잘 찾아낼 수 있다. ‘나무와 숲’

꽃과 풀, 곤충과 새 탐사활동은 어느새 상업적 생태기행 프로그램으로 '패키지'화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흐름은 물론 '생명권 보존운동'이라 일컬을 수 있는 '환경현안'과 전혀 연계되지 않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생태적 감수성' 함양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학교 안팎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제도권 환경교육이 차별적으로 불균등 발전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쇠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한 상황이 도래했다는 데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경기도와 같은 '도 교육청 선택과목'으로 지정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선택되지 못한 가운데 '쇠퇴'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수요자의 선택'에 방임한 7차 선택형 교육과정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국가경쟁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더라도, 환경교과는 애초에 '시류'를 탈 수 없었다. 그런데 7차 교육과정으로 '시류'에 영합하는 선택과목이 크게 늘어났으니 고등학교에서 '환경교과'를 채택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 일어난 것과 다름없는 일일 것이다.

도대체 이런 '모순'적인 사태는 어째서 일어나고 있는가? 굴이 회수를 건너 탕자가 되었듯, 한국에 도입된 '환경교육'이 기본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기본정신이 '근본 생태주의'건 '사회 생태주의'건 '영성 생태주의'건 마찬가지다. '생태주의'는 차치하고라도, '환경관리주의' 시각에라도 입각하여 '전체적인 방향'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인데, 한국의 현재 제도권 환경교육은 전체 '상'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결과는 국민소득 1만불이 넘어서고, 중간계급사이의 '부동산 투기전쟁'속에서 새롭게 부를 축적한 계층의 '웰빙'속에 환경교육이 환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원론적 세계관과 약탈적 자연관의 지양을 기본정신으로 일어난 환경교육이 말하자면 '오래되어 잃어버렸던' 시골살이 시절의 자연환경을 되살려 '체험'하는 '풍요로운 삶'의 구성부분으로 바뀌어 버린 셈이다.

5. 환경교육의 전망 - 두가지 화두

2004년부터는 유엔이 지정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10년'이 시작된다. 애초 이것을 제안한 '일본'은 아마도 아시아지역에서의 '국제수준 헤게모니'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유엔 산하기구인 유네스코는 이미 이 '범주'에 포착되는 일을 해오고 있었다.

유네스코의 개념과 일본의 제안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의 범주속에는 단순히 '환경교육'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북의 부국가 남의 빈국간 갈등을 조정하는 '국제이해교육'이 포괄되어 있으며 심지어 '양성평등 교육'과 '인권교육' 등등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 일본은 유네스코의 정신을 따라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교육이념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이다. 한국에서의 '환경교육'은 이를테면 국어교육, 영어교육, 과학교육 등의 '교과교육' 영역에 등치되거나, 통일교육, 성평등교육, 인권교육, 노동교육(!) 등의 영역에 등치되는 '여럿' 가운데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리고 술한 쟁점을 함축한 가운데 절충적으로 만들어진 어휘인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조차 제도권 교육에 알려지지 않다. 한 마디로 '무지'가 넘쳐 흐르고 있을 뿐이다.

환경교의 '녹색교육'은 이미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내포하는 이념으로 정립된 바 있다. 때문에 그것은 가령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부분 내포된 '경제발전'의 지향과 충돌이 불가피하다. 허나 한국사회에서는 차라리 논란속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개념조차도 계몽적으로 확산되는 단계가 필요한 듯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경제는 '소규모'임에도 외부와의 수출입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이며 독자적으로 확대재생산이 거의 불가능한 경제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이라는 한정어를 붙이기에 정말 어려운 경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방향은 사실상 몇몇 환경교사들의 이념과 사상속에 들어 있는 '이념형'에 불과함을 충분히 이해하며, 한국사회는 아직도 1992년 리우회의의 '협약'을 일깨우는 수준의 '계몽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 밖에 없다.

이렇듯 무지가 판치기에 '방사능폐기장건설'이라는 경제적이고 실리적인 문제가 대두될 때, 그것이 '우리동네'에 들어서지만 앓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이다. '천성산' 소송에서 법원이 결국 '개발'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것과 비슷한 것이다. 아직 한국 사람들에게 '생존'의 중심 화두는 '경제'이지 '환경'이 아닌 것이다. 바꿔 말해서, '지속가능한 경제'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내포하듯, 재생 가능한 경제라는 개념조차 한국사람들에게는 없다. 앞서 말한 바로 그 이유로 말이다.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의식은 명분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 해도, 가령 '천성산 도룡농' 소송 같은 문제에 들어오면 '경제우선'의 사고방식이 발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30만명이 '소송단'으로 참여해도 경제를 더 생존에 긴요한 조건으로서 '환경'에 대립시켜 사고하는 '30만명 바깥'의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어떻게 이런 상태를 넘어서는가? 다름아닌 앞으로의 '환경교육'이 감당할 문제가 아닌가? 이에 현직 '환경교사'로서 필자는 한국 환경교육의 '전망'과 관련하여 몇가지 화두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첫째, 체험학습 영역에서 과도하게 생태적 감수성 함양으로 기울어져 있는 바 이의 균형회복이 시급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환경현안과 관련되는 환경갈등의 역사와 구조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교육이 함께 해야 한다.

둘째, 환경교과교육이나 지식교육에서는 '기술공학적, 환경관리주의적' 접근법을 넘어 설 수 있어야 하며 보다 총체적인 안목의 구조적인 접근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환경교과서의 개정이나 새로운 저작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교과서 정책의 결정과 심의권한이 '시민사회' 내지는 교사들이 어느 만큼 확보해야 가능한 일이다.

셋째, 결국 '녹색소비'나 '환경관리주의', 환경현안에 대한 기술공학적 접근으로 요약되는 현 환경교과 지식교육과, '생태적 감수성'으로 요약되는 체험학습 영역의 환경교육이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 '접점'의 중요한 부분으로 '환경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이른 바 그동안 환경운동 영역에서 잊혀져 왔던 '정치경제적 상상력'의 회복과 관련된다. 환경정의는 이를테면 필자가 이 글의 맨 앞에서 언급한 바 있던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의 확대와 이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라는 문제와 연관

된다. 물론 ‘빈부격차의 심화’를 단순 정치경제학적 ‘테제’에 따라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이른 바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으로의 ‘환원’으로, ‘환경’의 문제의식을 잃게됨을 필자 역시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절대로 ‘피해버릴 수는’ 없는 문제이다. 때문에 ‘화두삼아’ 제안한다면 빈부격차, 분배의 정의 실현 이와같은 정치경제 영역의 문제들을 환경운동에서는 최소한 ‘환경정의’라는 개념적 틀속에서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인다. 말하자면 서구 녹색운동이 구사회운동으로서의 ‘사민주의 정치체제’를 비판하고 보다 ‘근본적인’ 입장을 제출할 수 있었던 것 처럼, 한국의 환경운동이 그러기 위해서는 서구에서는 구태의연하지만 한국에서는 1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새로우며 또 완전히 ‘결핍’ 상태인 ‘사민주의 정치체제’가 더 활성화되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러하다. 환경교육 또한 이러한 문제설정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6. 요약

환경운동 10년의 결과 ‘생태적 감수성’이라는 ‘감성영역’이 새롭게 개발되고 보편화 되었으며, 녹색소비의 정신이 확산되고, ‘환경’은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영역’으로 설정될 수 있었다.

이는 환경교육에도 확산되어, 녹색소비 운동과 관리주의적 실천은 이제 보편화되었다. 지방정부에서 ‘의제21’을 채택하여 개발연대에 직강화된 ‘도시하천’의 생태적 복원이 활발하게 진행중이고, 초중고교의 ‘녹색화’ 사업이 생태숲이나 생태연못 등등의 명칭하에 진행중이다. 한편 ‘환경교육진흥법’은 아직 계류중이긴 하나, 경기도와 같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체험적 생태교육 시설을 정책적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흐름도 있다.

또한 1999년의 동강댐 반대투쟁, 2003년과 2004년의 새만금 저지투쟁과 부안항쟁을 거치면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은 이제 ‘생명권’ 개념의 확산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체험 환경교육’의 보편화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교과교육으로서의 환경교육과 체험학습 영역의 환경교육은 ‘점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환경갈등’에 대하여 그것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는 방식의 ‘재발 방지’ 정치적 성과는 제대로 축적되고 있지 못하며, 환경교육은 ‘환경갈등’의 정치경제적 속성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지 못하다. 2004년의 환경교과사업방향중 하나가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흐름이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한다. ‘생태적 감수성’은 실천이라기 보다 안주와 ‘누림’의 영역으로 되기 십상이었기에 그러하며 실제로 상품화된 ‘생태기행’의 등장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럼에도 이는 10년전 ‘군사문화’가 우리안에 살아있던 것에 비하면 분명 큰 진전이다. 군사훈련식의 수련활동이 생명과 생태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는 ‘생태적 감수성’ 함양으로 전환된 것이 단적인 경우이다.

이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이후 학교환경교육 10년을 전망할 수 있어야 하겠다. 필자는 그 화두를 ‘환경정의’와 ‘생태적 합리성’에서 찾고자 한다. 생태적 감수성 키우기가 상업화 단계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생태적 합리성’이라는 체계적

인 지식교육을 거쳐서, '환경정의' 의식의 제고로 이어가고, 굵직한 '환경갈등'의 상황에서 뚜렷한 정치적 태도와 실천을 할 수 있는 '생태적 인간상'의 육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찌되었건 체험학습 영역에서는 환경현안에 대한 사회적 실천을 '교육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교과학습 영역에서는 한국사회의 환경현안에 대한 정치경제적 접근을 외면하지 말고 교과서 저작의 소재로 삼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환경관리주의'와 '녹색소비'에 머물러 있는 '환경 지식교육'과 실천을 한단계 진전시키는 작업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후 10년의 환경교육은 바로 '생태적 합리성'과 '환경정의'라는 두 '화두'에 터하여 세워져야 한다.